**독도영토학**

 한국의 독도 수호방안



|  |  |
| --- | --- |
| 소속 | 인문대학 체육학과 |
| 학번 | 22003453 |
| 이름 | 남형철 |
| 제출일자 | 2020.9.29  |
| 교수 명 | 최장근 교수님 |

이 글은 2차대전 이후 한국의 독도수호사에서 결정적이었던 1953~1954년간 독도에서 벌어진 한국과 일본 간의 물리적 대립과 충돌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취했던 적극적이며 현실적이었던 독도수호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도수호의 중요 분기점이 된 1953~1954년간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독도를 수호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독도?**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래 2,8km, 면적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듈래 2,6km, 면적 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본과 어떤 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1)1953년 한국의 독도수호 대책과 조사활동**

**(1) 정부의 대책 준비**

 외무부는 1953년 7월 8일 외무부, 국방부, 법제처, 내무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독도 문제에 관한 관계관 연석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 정무국장 최문경, 제1과장 최운상, 제1보 문철순, 국방부 해군 법무관 최병해 중령, 해군 법제위원회 위원 박관순, 김주천, 법제처 제1국장 박일경, 내무부 치안국 부산 분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 결과 4가지 결의 사항이 의결되었는데 첫째 등대 설치(외무부가 교통부와 교섭), 둘째 해군 함정 파견(일본 관헌의 표식 설치 여부 확인), 셋째 해군 수로부의 측량표 설치, 넷째 역사적, 지리학적 조사(외무부) 등이었다. 이 회의 결과는 이후 한국 정부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추진한 구체적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7월 10일 경상북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독도수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건의했다. 일본의 독도 불법점거, 일본령 표주 설치, 한국 어민들에 대한 퇴거 위협의 결과 한국 국회, 한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까지 모두 한결같은 목소리로 적극적인 독도수호 정책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독도 수호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첫째 내무부는 일본령 표목을 제거하였다. 내무부 장관은 7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북 경찰대를 독도에 파견하여 일본이 설치한 2개의 표목과 2개의 게시판을 철거했다고 발표했다. 철거한 일본령 표목, 게시판은 울릉도에서 경상북도 경찰국으로 이송해 보관했다.

 둘째 국방부는 7월 8일 일본인의 독도 상륙 및 일본령 표목 건립 사건과 관련해 현지조사를 행하기 위해 해군 군함 1척을 독도에 파견했다. 이는 7월 7일 외무부가 국방부에 일본 정부가 독도에 일본령 표지를 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군 함정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었다. 함정의 배수량 및 탑승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군 함정의 독도 파견은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시작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국방부가 독도에 파견한 군함은 약 1주일간 초계활동을 벌였다.

 셋째 외무부, 교통부, 내무부, 국방부 등은 독도에 등대 설치 및 측량표 설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독도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이 정책은 1953년 7월 이래 한국 정부가 추진한 가장 중요한 독도 수호 정책 중의 하나였다. 7월 9일 외무부 장관은 교통부 장관에게 독도에 등대 설치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방부장관에게는 해군수로부를 통한 측량표 설치를 요청했다. 이는 195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넷째 한국산악회의 독도조사가 1952년에 이어 1953년에도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산악회는 정부의 전폭적 후원 아래 1953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독도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본령 표주를 제거하고 한국령 표석을 세웠으며, 측량, 조사 작업을 벌였다.

 다섯째 1953년 7월 독도수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독도 수호를 위한 경찰 파견이 이루어졌다. 울릉도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파견되었다.

**(2) 울릉도 경찰서 순리반의 독도 수호활동**

 한국 측 기록에 따르면 경위, 경사, 순경 3명으로 구성되고 경기관총 2정을 보유한 정도였다. 독자적인 순찰선이 없어서 독도에서 조업하는 울릉도 어민의 작은 동력선을 빌려 타고 울릉도에서 독도로 건너간 것이었다. 배성희 소유의 이 목조 동력선은 5톤 정도의 규모였다. 이에 반해 돗토리현 해상보안부 소속인 일본 순시선 해구라호는 450톤의 철선이었고, 약 30여 명의 해상보안부 관리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순시선의 규모와 인적 규모에서 한국은 일본과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였다. 이것은 한국의 약점이었다.

 한편 한국 경찰들은 독도가 한국령이며 한국 어민들이 조업하는 한국어장이므로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확신이 분명했다. 여기에는 의지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심과 강경대응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한국은 강경 대응을 해서라도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한국의 강점이었다. 반면 일본 순시선과 관리들은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확신이 불분명했으며, 평화헌법에 의해 교전권이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한국의 강경 대응에는 회피 이외의 선택지가 없었다. 일본의 분명한 약점이었다. 때문에 인력 장비의 규모에서 현격한 열세에 있었으나 독도 수호 의지가 분명했던 울릉경찰서 경찰들은 교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했고, 이를 통해 일본의 약점을 타격할 수 있었다. 즉 1953년 울릉경찰서의 독도 수호는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확신에 기초한 모험적 행동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처방식이 1954년까지 한국 측이 장비, 인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3) 한국산악회의 독도 조사와 영토표석 설치**

 일본의 독도 침범으로 인한 긴장,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0월 13-16일 한국산악회의 독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국산악회의 「울릉도 독도 학술 조사단 파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의 제1목적은 독도와 인근 수역에 대한 조사였다. 조사 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조사대는 일본이 세운 ‘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라고 표시된 표목을 뽑아냈다. 동도와 서도에 각각 1개씩 있던 표목에 태극기를 걸어 사진 촬영을 한 후 뽑아내 해군 경비정에 실었다. 철거한 일본령 표목 중 1개는 울릉경찰서에 보관하고 다른 1개는 해군 405호에 양도했다.

 둘째 조사대는 1952년 설치하려다 실패했던 표석을 10월 15일 설치했다. 표석은 경상북도가 세운 독도 어민조난자위령비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세워졌다. 이 표석은 독도조사대의 철수 직후 일본 정부에 의해 철거되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독도에 대한 측량작업과 조사 활동을 벌였다. 측량을 제외한 학술조사 활동은 간단하게 종결되었다.

 **2) 1954년 한국정부의 순차적 독도수호정책**

**(1) 상주 경비병력의 배치, 경비초사의 설립**

한국 정부가 독도에 경비대원을 상주시킨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미상이다. 이미 1953년 8월 울릉군 남면 도동에 거주하는 배성희는 일본의 계속된 독도 침범으로 어민들의 어로작업에 위협을 가해서 현재는 작업을 일제히 중단하게 되었다며 ‘독도에 대한 특별한 감시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배성희의 청원은 내무부 치안국을 거쳐 외무부로 전달되었고, 외무부는 이를 국방부에 전달하며 ‘특별한 감시대책’을 요청했다. 최초의 본격적인 경찰, 군대의 독도 경비 강화 요구는 울릉도에 거주하며, 독도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민들로부터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간경비대, 민간수비대, 자위대 등으로 불린 민간인 외에 상주 경찰이 파견된 것은 언제였는가? 「경찰 10년사」는 1954년 6월 11일 독도에 해양경찰대를 급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기록, 연감류의 기록과 동일하다. 일본의 다무라, 가와카미는 모두 1954년 6월 17일 서울발 UP통신을 인용해 “한국연안경비대는 독도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주둔부대를 동 섬에 급파했다”는 한국 내무부의 발표를 인용하고 있다. 6월 11일 파견된 해양경찰대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 파견된 해양경찰이 독도에 상주했는지는 정확치 않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6월 8일, 7월 7일 해양경찰의 경비선, 경비대원들이 독도에 도착해 순찰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주 경비대원의 존재는 7월 28일에 가서야 확인되기 때문이다.

 독도 경비초사는 1954년 8월 1일 한국정부의 독도경비조치 직후에 건립되었으며 온돌방 한 칸, 청마루 한 칸 등 두 칸으로 이루어졌다. 경비초사의 위치는 일본해군이 러일전쟁기 러시아함대를 감시할 목적으로 한국에 설치한 20개의 망루 중 독도에 설치되었던 자리로 알려져 있다. 「국립경찰 50년사」는 1954년 8월 26일에 독도에 경찰의 경비초소가 설치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과 순시선 침입에 대비해 경사 1명, 순경 4명, 의경 10명을 주둔시켜, 6회에 걸친 일본순시선의 내침을 격퇴시켰다고 쓰고 있다. 당시 언론들도 1954년 8월 26일자로 “국립경찰 당국에서는 일본정부의 영토확장 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 독도에 감시초와 독도경비를 전담할 선박구입 및 인원 배치 등 만반의 경비책을 완료하였다고 한다”고 보도하였다. 때문에 독도 동도에 건설된 경비초사는 1954년 8월에 급격히 건설되기 시작해 8월 26일 완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영토표지, 등대, 무선시설의 설치**

 ① 영토표지의 설치

 1954년 1월 18일 영토표지를 독도에 설치한 이 표석은 동도 서측 해안 위령비 건립장소 부근에 있으며 문구는 한글이 아닌 한자로 “大韓民國 慶尙北道 鬱陵郡 獨島”(”울릉군 독도. 대한민국 경상 북도”) 라고 표기되어 있다.

 ② 향로표식(등대), 무선통신 시설의 설치

 1953년 7월 8일 ‘독도문제에 관한 관계관 회의’에서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외무부가 책임지고 교통부와 교섭하기로 했다. 그런데 교통부는 1953년 8월 27일 외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사실상 등대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교통부는 등대 설치에는 막대한 예산, 직원배치 문제, 주식, 부식, 음료수, 업무용 물자 보금 등이 필요하며, 간수가 없는 등대의 경우에도 월 1회 연료보급을 해야 하니 독도 등대의 시급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정부의 등대설치는 1954년에 가서야 가능했다. 등대 설치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교통부는 1954년 8월 10일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이날 정오 점등하였다.

 한국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필리핀, 교황청 등 주한 외국공관에 이를 통보했고, 로마교황청은 이에 축하인사를 회신했다. 외무장관은 9월 3일 주일공사에게 독도에 항로표식(등대)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일본정부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주일대표부는 9월 15일 「독도 등대설치에 관한 통고서」를 일본외무성에 전달했고, 일본외무성은 9월 24일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항의서를 보내왔다. 독도등대는 항로표식으로 미국 수로지에 등재되었다.

 한편 「경찰 10년사」에 따르면 독도에는 1954년 8월 10일 무선시설을 착공하기 시작했고, 9월 20일 이를 완성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독도-울릉도 간의 무선시설은 1954년 8월 27일 3시부터 개통되었다. 10월 2일 독도해역에 침범한 일본 순시선이 목격한 10m 높이의 4m 간격의 기둥이 바로 무선통신 시설이었을 것이다. 또한 1955년에는 독도경비대에 배속된 선박에도 무선시설 공사를 마쳤다. 이 경비선박에 대한 무선공사는 1955년 9월 29일 설치에 착수하여 10월 5일 BC 1919 75W송신기 1대, BC 312 수신기 1대를 시공하였다.

**(3) 국회 독도시찰과 정부의 조사, 선전활동**

 독도 시찰을 마친 기상돈 의원은 국회본회의(1954.8.6)에서 ‘독도에 대한 무장병 파견 및 방위시설 등의 설비’를 강조했다.

 국립중앙수산시험장은 1954년 11월 한 달 동안 독도에 대한 수산자원 실태를 조사했다. 이는 수산분야에서 이루어지니 한국정부 차원의 최초의 독도 실태조사였다.

 한국정부는 독도에 대한 순차적 상주 경비시설을 완료하고 난 뒤인 9월 15일 독도사진을 넣은 2원, 5원, 3원 등 세 종류의 우표를 발행했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령이라며 독도우표가 붙어있는 우편물의 한국반환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지만, 만국우편협약에 위배되는 일이었으므로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1953년 한국산악회의 독도조사과정에서 이용민 감독이 촬영한 문화영화 「독도」를 후원했는데, 총 17만 2백 원을 후원했다. 이 영화는 기록영화로 각종 문헌의 제시, 동식물 분포계통의 증거, 울릉도와 지리적 연계성, 어업장의 가치 부각, 일본선박 침범, 독도수호 해군활동상, 국내여론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알려져 있다.

**마무리하며**

 2차 대전 이후 한국의 독도수호사에서 1953~1954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어 주권을 회복한 이후 실력으로 독도를 점령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다양한 방식의 충돌이 벌어졌다. 1951~1952년간은 외교적 성명이 오갔으나, 1953년 5월 이후 일본은 독도상륙, 한국령 표지 제거, 일본령 표지 설치, 조업 중인 한국어부 협박 등의 물리적 강압을 동원했다. 1952~1953년간 독도에 대한 주일미공군의 폭격연습장 지정, 해제 책략이 완성된 뒤에 본격적으로 독도에 침입했던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 측은 초기부터 울릉도경찰, 해양경찰 등의 공권력이 독도를 수호하기 시작했다. 1953년 아직 상주 경비병력을 파견하지 않았던 한국은 울릉도경찰서 독도순라반이 장비, 인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총격전을 불사함으로써 독도수호 의지와 결의를 표명했고 1954년 중반 이후 한국은 독도에 순차적으로 영구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시작함으로써 독도가 한국령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했다. 즉 한국은 등대를 설치한 후 국제수로국에 통보했고, 이는 항로표식으로 미국 수로지에 등재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상비 경비병력을 독도에 파견했으며, 이들의 막사 및 경비초소를 건설했고, 통신장비를 갖추었다. 독도 상비 경찰들은 일본 순시선에 대한 총격, 포격을 감행하면서까지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1954년 한국정부의 ‘순차적 행동’의 결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이 ‘가상사실’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본 정, 관계가 가장 우려하는 바가 되었다. 한국은 독도에 등대, 막사, 통신, 한국령 표지 등의 시설을 완성하였고, 상비 경비병력을 주둔시켰으며, 나아가 무력충돌을 불사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구 식민지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도발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955년 이후 독도에서는 더 이상 일본 측에 의한 독도상륙 시도나 인접수역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독도에서의 분쟁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관련 기록의 생산도 현저히 급감했다.

그 외 독도의 상주인원은 독도의 주민 고 최종덕씨가 1965년 3월에 최초로 거주했으며, 그 뒤로 고 김성도씨와 그의 부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민으로 거주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2017년 3월 기준으로 25명(24세대)이 등록되어 있다. 또 독도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독도에 대한 정확하고 거짓 없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